

보도일시 (인터넷) 2026. 6. 9.(화) 11:00
(지면) 2026. 6. 10.(수) 조간

배포 2026. 6. 9.(화) 06:00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 '시·군 역량강화' 6개 지방정부 최종 확정
- 어촌지역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살고 싶은 어촌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와 시·군 역량강화 지방정부 6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 5월 서류평가와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내실 있는 사업지를 엄선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유형에 따라 향후 5년간 맞춤형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 유형별 선정지역 현황 >

유형	사업기간	선정지역					
		시·도	시·군	대상지명	시·도	시·군	대상지명
권역단위 거점개발 (총사업비 100억 원, 국비 70억 원 이내)	5년 이내	충남	태안군	송현1리	경북	영덕군	축산
		전남	고창군	심원면	경남	통영시	신봉
			완도군	청산동		거제시	가배
		전북	진도군	용등	제주	제주시	상명리
			신안군	자은한운		서귀포시	신흥·삼달
시·군 역량강화 (개소당 2억 원, 국비1.4억 원 이내)	1년	강원	삼척시	-	전남	장흥군	-
		충남	태안군	-	경남	거제시	-
		전북	부안군	-		남해군	-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①권역단위 거점개발(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지원)과 ②시·군 역량강화(주민·마을 발전 역량강화) 사업 2개 유형으로 추진

특히, 해양수산부는 각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과 소득 기반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해당 어촌 지역에 다목적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공동작업장·지역음식판매장, 마을 경관 정비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단위 거점개발 10개소에는 5년간 총 약 443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소득증대 시설 조성을 통해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로 선정된 지방정부 6곳에는 1년간 총 약 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각 지방정부는 마을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홍 근 형 (051-773-6170)
		담당자	사무관	황 현 태 (051-773-6048)

